

# 새정부 출범 6개월 노동정책 추진 실적

## I. 6개월간 주요정책 추진방향

- 노동부는 새정부의 비전인 '선진 일류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①노사관계 선진화, ②활력있는 노동시장, ③국민을 섬기는 따뜻한 노동행정을 3대 기본과제로 삼고 주요 정책과제를 추진
  - 노사관계가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의 원동력이 되도록 **상생의 노사협력기반 구축 및 노사관계 법치주의 확립** 등을 통한 '노사관계 선진화'를 중점 추진
  - 많은 국민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근로기준 선진화·사회안전망 강화 등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을 높이고
    - 사회적기업 육성, 여성·청년·고령자 등 수요자별 일자리 지원대책과 평생직업능력개발체제 구축 등을 적극 시행
  - 취약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 규제개혁 추진 등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노동행정**을 시행

## II. 주요과제 추진실적

### 1] 노사관계 선진화

- 노사협력 확산
  - 개별 사업장 노사는 정부 의존 타성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형성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음**
  - 사업장 단위 분류발생 건수 '08.8.28기준 100건, 전년동기(173) 대비 42%감소
  - 교섭 단위 분류발생 건수 '08.8.28기준 78건, 전년동기(76) 수준
  - **노·사의 자발적인 협력 의지도 확산되고 있음**
  - 8.28 현재 사업장, 지역·업종 단위 노사협력선언은 총 1,447건으로 전년동기 대비(456건) **3배이상 증가(217%)**

-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 노사화합선언은 총 53건으로 전년대비(20건) 증가
- 노사관계 법치주의
  - 법치주의 기조 유지와 노사협력 촉진 등으로 **안정분위기 확산**
  - 노동지청별로 「불법행위 예방팀」을 구성('08.4), 불법행위의 효율적 대응 및 유관기관 협조체제 강화
- 효율적인 분류예방 및 조정서비스 제공
  - 노사갈등에 대한 대응전략을 적기 마련, 적극적인 노사분규 예방활동 및 조정서비스를 강화
  - 금속·보건·공공 등 취약업종별 노사관계 TF 구성·운영
  - 한나라당-한국노총 정책협의회 운영 지원 등을 통해 노사갈등 사전 예방 및 해소에 노력
  - 장기분규사업장 해결 지원을 위하여 노동부 본부-지방관서 TF를 구성하여 노사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

### 2]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

- 여성·건설일용·노숙자 등 취약계층 전담 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 확대('07년 27개소 → '08년 41개소)

< '08년 상반기 취약계층 전담센터 운영실적 >

(단위 : 건, %)

사업명	구인		구직		취업	
	'07.7	'08.7	'07.7	'08.7	'07.7	'08.7
합계	2,939	12,914	6,216	35,025	5,061	17,820
여성고용지원센터	447	2,161	1,386	4,859	302	1,327
건설인력고용지원센터	2,492	9,941	4,830	29,406	4,759	16,426
산업단지고용지원센터	-	812	-	760	-	67

- 직업진로지도 프로그램 외주화(Insourcing) 시범사업(2개 프로그램, 33개 센터) 실시('08.3)\*, 취약계층 심층상담 전담제 시행('08.2) 및 고용지원센터 경영컨설팅 지표 개발 등 공공고용서비스 운영 혁신

< 고용지원센터 취업지원 실적 >

구 분	'07.7	'08.7
구인인원	557,793	667,547
구직건수	1,174,518	1,216,081
취업건수	301,321	331,177
취업률(%)	25.7	27.2

○ 고용보험(실업급여)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생계급여)로부터 제외되고 있는 저소득 취업예외계층에 대한 통합적인 취업지원 패키지 프로그램 실시를 위한 제도 마련 추진

- 관계전문가 TF회의('08.5~7월, 총 7차례) 논의결과를 토대로 「저소득층 취업지원에 관한 법률」 부처안 마련 ('08.9)
- 민간고용서비스 시장 육성을 위한 직업안정법 전면개정관련 연구용역 실시('08.8월 완료)
- 직업소개 가격규제 혁신, 종합인력서비스 회사 육성, 민간위탁 등을 통한 민간시장 투자 확대 등

③ 취약계층 보호

○ 체불근로자 및 연소근로자 보호

- 체불근로자의 실질적 권리구제 강화를 위해 체불청산지원팀 확대('07년 15개소 → '08년 20개소), 체불행정혁신 방안 마련('08.5)
- 「연소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및 강화를 위한 종합 대책」 마련·시행('08.7), 연소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동협약서\*\* 체결
- 종합대책 주요 내용 : 연소근로자 권익침해 사례 일제신고기간(6~8월, 12~2월) 운영, 주요 포털 사이트, 싸이월드 홈페이지, 알바몬 등에 「cyber 신고센터 운영 등
- 노동부장관과 총 22개 기관(연소자 다수고용 사업체 및 협회, 청소년 관련 단체, on-line 주요 포털사이트, 청소년 알바 구인·구직 전문사이트 등) 참여

○ 최저임금 결정 및 제도개선

- 노·사·공익위원 합의로 '09년 최저임금을 현행 대비 6.1% 인상(시급 4,000원)키로 의결, 물가 상승 및 중소기업 경영난 고려, 2년 연속 합의 도출
- 당초 노동계는 26.3% 인상,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

○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 '08.7.1부터 보험설계사 등 4개 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 예상 적용대상 약 48만명 중 '08.8.18 현재 수혜대상 61천명
- 소규모 건설현장 산재보험 적용 확대('09.1.1 시행)
- 적용대상 : 개인이 시공하는 연면적 100~330㎡ 건축공사현장 및 200㎡ 이상 대수선 공사현장 약 2,200개소(근로자 약 1만여명)

○ 영세사업장 고용보험 가입 촉진

- 고용보험 가입률이 현저히 낮은 비정규직, 영세사업장의 가입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08.6.19)
- 고용보험 가입률 : 비정규직 49%, 9인이하 사업장 36.4%
- 법안 주요 내용 : 9인이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특별신고기간 운영하고 동 기간에 자진 신고한 미가입 사업장 또는 적용누락 근로자에 대해 체납보험료 면제 조치

○ 사회적 기업 육성

- 취약계층에게 정부재정에 의존하지 않고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을 적극 육성
- 사회적일자리 예산집행실적('08.7월말 현재 470억원, 7,991명)
- 사회적기업 2/4분기까지 인증개수 [54개소('07년) → 108개소('08.8월 현재)]

-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해 인증요건 개선 등 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인 발전방향을 담은 기본계획 초안을 마련

○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제도 개선

-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을 위한 정년연장 장려금제도를 도입·시행('08.1)
- 고령자 우선고용직종을 현장성 있는 직종으로 개편 확정·고시(7.25)

○ 중증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의무고용제도 개편

- 중증장애인 2배수 인정제도, 공공기관의 의무고용률 상향 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 추진(7.17~8.7 입법예고, 8.18 공청회)

**4 일·가정 양립 지원 등 여성고용 촉진**

○ 육아휴직 분할사용 허용, 시간제 육아휴직 도입 등 육아휴직 유연화 확대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시행(6.22)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6.5) 및 시행규칙(6.20)」 개정 완료

○ 일·가정 양립형 일자리 정보제공서비스 강화

- \* 여성 Work-net에 '단시간근로(파트타임) 일자리 정보망'을 구축하여 업종별, 지역별, 고용지원센터별 상용직인 시간제 근로관련 구인·구직 정보를 제공('08.7.15)
- \* 고용지원센터 내에 주부 등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전담상담원을 지정, 여성에 대한 종합적인 기초상담 제공('08.6)

**5 퇴직연금제도 확산**

○ 주요성과

- '08년 상반기 적극적인 홍보, 교육, 컨설팅 사업 등으로 퇴직연금이 빠르게 확산

〈퇴직연금 도입 현황〉

구 분	'08.1월	'08.7월	증가율
가입자수(명)	55만3,375명	76만9,710명	39.1%
적립금(억원)	2조7,7857억원	4조1,321억원	48.3%
사업장수(개소)	3만1,339개소	4만1,079개소	31.1%